

광주도시공사 사망자에 집세 부과 논란

고독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유족에 임대료·관리비 지급 소송 제때 계약 해지 않고 부과...주거급여 자동납부시스템 지급

광주도시공사가 고독사 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수년 동안 임대료·관리비를 부과했다가 뒤늦게 유족 10명에게 밀린 집세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제때 하지 않은 채 이미 사망한 주민에게 임대료·관리비만 부과했던 셈이다.

특히 광주지역 3곳의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관리비 채납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해 이들 주민의 생활 실태 조사와 함께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광주시가 제때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했던 A(사망당시 73세)씨의 밀린 임대료와 관리

비 210만8340원을 받기 위해 A씨의 형제 등 유족 10명을 상대로 건물명도변경과 채납 임대료·관리비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3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2016년 9월 3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18년 7월 3일까지 2년 넘도록 임대료·관리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형제 등 10명이 상속비용에 따라 각각 8만7847원~35만139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A씨가 갚지 못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모두 내 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숨진 A씨를 며칠만에 발견한 이웃 주민과 주민자치센터 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 수소문 끝에 이들 유족을 찾아내 화

장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족이 A씨의 남은 살림을 임대아파트에서 모두 처리하지 않았고, 광주도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관리비를 부과했다.

현재 A씨 유족 10명 중 4명이 소송과 관련된 송달된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자칫 기간차리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일부 유족과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 등이 제때 집을 정리하지 못하면 광주시는 계속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LH 등은 정부가 사회 약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자동으로 입금하는 '주거급여 자동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이 같은 문제를 줄이고 있다. 거주자의 사망 처리가 되

면 정부가 자동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 운영기관이 실시간으로 거주자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의 영구임대 아파트 채납액도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억3000만원에 달해 언제든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현재 광주시 영구임대 아파트 3곳의 176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이들의 정확한 상황 등에 대한 조사도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A씨 유족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 5000여만원을 들여 주거급여 자동납부 시스템을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중 1인 가구 비율이 65%에 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 오피스텔 제외

광주시의회 도시계획 개정안 통과 상업시설 의무면적 비율 조정

〈속보〉광주시가 앞으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신축할 때 오피스텔은 비주거시설, 즉 상업시설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제외하곤 순수한 상업,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상업시설 의무면적 비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21일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분회회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상업시설로 인정하면서 '고층 오피스텔+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속해 들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역 건설·건축업계의 반발로 인해 점진적인 방안을 마련, 우선 주상복합 신축 시 비주거시설의 의무면적을 최소 20%로 상향하고, 주거용도의 경우 주거용적률 400%를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했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즉 상업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이 같은 시의 점진적인 추진안에 반발하면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재수정안을 내놓았다. 시의 최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었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를 다시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비주거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다소 융통성 있게 조정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가 고층·고밀도 들어서면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 다행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시가 건설업계 반대를 이유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 의무 비중에서 제외하는 안을 삭제해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었다"며 "상업 의무비율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아쉬운 부분이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상복합 난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시가 건설업계 반대를 이유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 의무 비중에서 제외하는 안을 삭제해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었다"며 "상업 의무비율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아쉬운 부분이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상복합 난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

광주시, 전문강사 58명 확정

광주시는 21일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3·3·3운동'의 하나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모를 거쳐 올해 교육을 맡을 안전교육 전문강사 58명을 확정했다.

강사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1~11호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27명, 재난대응분야 18명, 심폐소생술분야 13명을 선발했다.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인, 노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영·유아기, 청소년, 청·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또한 학교, 기관, 단체에서 재난안전 교육 시 시로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교육한다. 문의 062-613-2943.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21일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KDN(주) 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금 문제를 지적하며, 나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전남지사 한옥 공관 매각 속도 낸다

도의회 공유재산 변경동의안 가결 전남도는 동의안이 분회를 통과하면 한옥 공관에 대해 복수기관을 선정해 감정 평가를 한다.

한옥 공관인 '어진누리'는 건축비 14억원, 현 시세가 17억~1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캡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공관을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옥 관사는 1층 전용 주거지역에 포함돼 상업용도 전환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라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후 밝힌 한옥 매각이 도의회 동의가 사실상 이루어지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관사는 박준영 전남지사 시절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청 뒤 편에 착공 1년6개월만인 2006년 10월 도지사 공관을 완공했다. 고액 건축비 못지 않게 관리비도 연간 2억원에 달해 폐지 여론이 확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후 밝힌 한옥 매각이 도의회 동의가 사실상 이루어지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청년 800명 일터 제공·'임 행진곡' 뮤지컬 갈라 공연

광주문화재단 업무 보고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110만 시민에 문화예술 제공, 청년 800명에 문화일터 제공,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7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 연대갈라 공연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광주문화재단을 찾아 경영성과 창출계획 보고회를 갖고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경영 성과 창출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 계획서에는 문화시민, 문화일터, 문화물결,

문화콘텐츠의 4대 성과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문화시민'을 위해 364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74개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소외계층 등 복지지원 수혜자 확대, 문화보듬 1만운동 및 기업 매세나 등 광주문화재단 프로젝트 운영인력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도형 청년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청년문화일터 총 800개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 오천항 등 5곳 국가어항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는 21일 고흥군 오천항과 신안군 송도항, 인천 옹진군 진두항, 전남 군산시 개야도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 등 5곳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어항들은 어선 정비 등 전통적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고흥 거금도 끝자락에 위치한 오천항은 여객부두를 확충해 인근 초도, 손죽도, 거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교통거점 어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첫새우 생산량의 70%가 유통되는 송도항은 위판장 부지와 주차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한국전기공사협회